현안리포트 05-

EU헌법조약 비준 연기 및 예산안 부결의 파급효과

2005. 6

kotra 해외조사팀

요 약

6월 16일~17일의 EU 정상회담에서 EU 헌법조약 비준 시한이 무기한 연장되고, 2007년~2013년의 중기 예산안이 부결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통합의 경제적 효과 불확실, 동구의 저임노동력 유입으로 인한 실업난 가중, 통합속도 가속화에 대한 불안감 등이 비준 반대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헌법조약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과 회원국들의 국내 사정(총선 등)으로 미루어볼 때, 당분간 헌법조약 비준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 부결의 결정적인 원인은 영국의 농업보조금 삭감 요구와 프랑스, 독일 등의 영국의 분담금 리베이트 폐지의 충돌이지만, 구회원국들에서 고조되고 있는 높은 자국 분담금 수준과 낮은 경제적 혜택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각국 정부는 EU 통합/확대 지지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국 경제성장 및 실업해결을 우선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서유럽을 막론하고 업계에서는 헌법조약 비준 연장, 예산안 부결로 인한 신용도 하락, 투자위축 등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나, 구회원국에서는 통합/확대 속도 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반면, 신회원국 및 가입후보국에서는 통합/확대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헌법조약 비준 무기연기와 예산안 부결로 인하여 EU 통합 지연, 정책 결정 속도 저하, 정책 초점 변화에 따른 EU 집행위원회의 영향력 감소 등이 전망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EU 내 불확실성 증대로 유로화가 약세를 지속할 것이며, 자국 이익 우선시 경향으로 대외통상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예산안 부결과, 유로화 약세로 인한 서유럽 구매력 감소는 동유럽 경제회복 및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며, 이는 급증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對 유럽 수출/직접진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목 차

I. 위기에 빠진 EU	1
1. EU 헌법조약 비준 반대 및 비준 시한 무기한 연장 / 1	
2. 헌법조약 비준 반대 이유 / 2	
3. EU 2007~2013 예산안 부결 / 3	
4. 예산안 부결의 원인 / 4	
II. 주요국별 동향	5
III. 파급효과.....	13
1. 정치적 측면 / 13	
2. 경제적 측면 / 15	
3. 한국에 미치는 영향 / 16	

I. 위기에 빠진 EU

1. EU 헌법조약 비준 반대 및 비준 시한 무기한 연장

□ EU 헌법 조약을 국민투표로 비준하려던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잇따라 비준에 실패하였으며, 영국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정되어 있던 국민투표를 취소

※ 동 조약은 마스트리히트 조약('92년), 암스테르담 조약('97년), 니스 조약('01년) 등 기존의 EU 및 EC 조약들을 모두 통합·단일화하고 일부 제도적 사항(대통령 및 외무장관직 신설, 가중다수결제 도입, EU집행 위 및 유럽의회의 인원수 제한 등)을 추가하여 하나의 법률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정치통합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

□ 6월 16~17일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는 헌법 재협상 없이 회원국들의 국별 비준절차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비준 거부의 교훈을 되새기기 위한 '숙고의 시간(period of reflection)'을 가지기 위해 당초 비준 시한(2006년 11월 1일)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기 비준을 완료한 11개국(벨기에는 비준 거의 완료) 외에 덴마크, 포르투갈, 아일랜드, 영국, 스웨덴, 핀란드, 체코, 폴란드 등 8개국이 비준절차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폴란드,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말타, 룩셈부르크 등 4개국은 비준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거나 연기할 예정

※ 국별 비준 현황 및 향후 절차

구분	국가	현황
기비준국	리투아니아	2004.11.11 (국회)
	헝가리	2004.12.20 (국회)
	슬로베니아	2005.2.1 (국회)

	이태리	2005.4.6 (국회)	
	그리스	2005.4.19 (국회)	
	슬로바키아	2005.5.11 (국회)	
	스페인	2005.5.18 (국민투표)	
	오스트리아	2005.5.25 (국회)	
	독일	2005.5.27 (국회)	
	라트비아	2005.6.2 (국회)	
비준 거부국	프랑스	2005.5.29 (국민투표, 반대 54.87%)	
	네델란드	2005.6.1 (국민투표, 반대 61.6%)	
비준 진행중인 국가	벨기에	상원은 4.28, 하원은 5.19일 비준. 현재 지방정부 의회에 상정중	
비준절차 연기 국가	덴마크	'05.9.27일의 국민투표를 무기한 연기	
	포르투갈	'05.10월의 국민투표를 무기한 연기	
	아일랜드	국민투표 연기	
	영국	'06년초의 국민투표 연기	
	스웨덴	'05.12월의 의회 비준 연기, '06년 가을에 실시여부 및 시기 결정	
	핀란드	'05년말 혹은 '06년초 예정인 의회비준 연기	
	체코	비준 연기	
	폴란드	비준 연기	
비준 예정 국가	국회비준	사이프러스	'05.6.30일 특별국회를 통해 비준예정
		에스토니아	금년중 국회 비준 계획 재확인
		말타	'05.7월중 국회 비준 강행
	국민투표	룩셈부르크	'05.7.10일 국민투표 예정. 정상회담직후 룩셈부르크수상은 연기 여부는 의회 결정사항이라고 밝힘

2. 헌법조약 비준 반대 이유

- EU의 지도자들이 향후 EU 통합의 모습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EU 통합 추진 절차가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서 일방적이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반발이 확산

- 회원국 수가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크게 늘어남으로써 EU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가 채 가시기도 전에 보다 심도 있는 정치통합을 무리하게 시도
- EU 리더들은 정치적 통합과 확대 등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서유럽의 경우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데 대한 불만이 표출
- 경제발전이 뒤쳐진 신규 회원국의 저임 노동력의 유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구 회원국에 팽배해진 가운데, 최근 EU가 추진하고 있는 회원국간 서비스시장 개방화는 구 회원국의 반 통합 정서를 증대시킴
- 미국 경제에 대항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자유경쟁 논리가 시장을 압도하면서 서구의 전통적인 사회보장 체제가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3. EU 2007~2013 예산안 부결

- 6월 17일의 EU 정상회담에서 영국은 농업보조금 삭감, 즉, EU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공동농업정책(CAP) 수정 없이는 예산 분담금 환급('84년 영국이 심각한 경제불황 상황에서 얻어낸 환급규정으로, 동 규정을 통해 영국은 EU 재정분담금 중 매년 30억파운드 내외, 21년간 500억파운드 가량을 환급받음)문제를 양보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서면서 예산안 부결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
-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경제규모를 감안하여 자국 분담금 규모가 과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안을 거부한 반면, 지난해 신규 가입한 10개국은 자국에 대한 보조금 삭감제안까지 하며 예산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핀란드와 스페인의 반대가 이어지며 예산안은 결국 부결됨

- 결속기금, 개발기금 등의 다개년 프로그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12~18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영국이 의장국을 맡는 차기 6개월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07년 이후의 예산 집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

4. 예산안 부결의 원인

- 예산안 부결의 가장 결정적 원인은 영국과 프랑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나, 예상외로 많은 국가들이 자국 분담금 삭감을 요구하면서 예산안 합의에 반대
- 구 회원국 내에서는 신규 회원국보다 많은 분담금을 내는 반면 혜택은 적게 받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시민들이 늘고 있으며, 헌법조약 비준이 부결된 이후 이러한 국민 여론을 외면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 부결 이후, 일각에서는 향후 개별 회원국들의 자국이기주의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예상외로 많은 국가들이 자국 분담금의 부담을 이유로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들이 예산안 합의에 반대함으로써 영국의 입지는 정상회담 이전보다 강화되었으나, 프랑스와 독일은 자국의 내부 반발과 예상외의 예산안 부결로 충격을 받은 모습

II. 주요국별 동향

1. 프랑스

- 프랑스 정부는 국민투표 부결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EU통합/확대에 대한 여론을 수용,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외국인 불법 이주에 강력 대처할 방침
- 국민투표 부결은 현정부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불신임적 성격이 강하였으며, 선거 후 총리 사임 등의 개각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민들은 새로 구성된 내각이 실업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 시장조사기관인 TNS-Sofres의 설문에 따르면 반대표를 던진 사람 중 46%는 실업 문제, 40%는 국내 정세에 대한 불만 때문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대답
- 자크 시락(Jacques Chirac) 대통령의 신뢰도는 거의 바닥 수준에 이르고 차기 대권의 유력 후보인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집권당 대표의 입지가 한층 강화
- 기업인들은 헌법조약 부결로 인하여 국제무대에서 프랑스의 영향력 축소를 예상하면서, 기업 이미지 추락, 신용도 하락, 투자자의 신뢰 상실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기술 기업들은 국민투표 부결 등으로 프랑스가 과거로 회귀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에 될 것으로 예상
- 프랑스 노조(민주노동연합 제외)는 신임 총리에게 자유 경쟁이 아닌 프랑스적 사회모델을 지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EU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여세를 몰아가고 있음

2. 네덜란드

- 그동안 EU 내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자 했던 네덜란드 정부로서는 국민투표 부결로 인하여 EU 내에서의 입지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분석
- 네덜란드 정부는 국내 여론을 의식해 EU 예산안에서 네덜란드의 분담금 축소를 주장하면서 예산안 협상 결렬에 일조
- 네덜란드 경제계 및 업계측은 유럽헌법 비준을 통해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비준 부결과 예산안 결렬이 유로화의 약세 및 향후의 유럽 경제침체로 이어질까 우려를 표명
- 국민투표 참여율은 50% 미만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63.3%를 기록하여 네덜란드 국민들의 유럽 통합 및 헌법조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단적으로 나타냄
- 이는 지난해 5월 동구권의 EU 신규 가입으로 인한 이민자 급증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이 초래되자 금년초부터 EU확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는데 기인하며, 국민투표 부결은 예상한 결과

3. 영국

- 영국 정부는 EU 헌법조약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 부결 이후 곧바로 '06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국민투표를 무기한 연기
- 영국은 프랑스, 독일 등이 주도해 온 EU 확대/통합 등에 있어서 여러 회원국의 동조를 이끌어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높이고 있으며, CAP(공동농업정책)의 개선, 즉 농업보조금 예산 삭감 없이는 리베이트(환급금)를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EU 예산안 결렬에 결정적 역할

- 기업들은 EU 통합에 따른 시장확대, 물류활성화 및 신규 투자처 확보 등 기업활동 증대에 대한 기대로 EU 헌법조약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EU 예산안 합의 실패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
- 영국 국민들은 EU의 정치적 통합과 지속적인 확대에 의한 영국의 정체성 약화, 저임금 인력 유입, 터키 가입에 따른 기독교 문화 훼손 등에 대한 우려로 처음부터 EU 헌법조약 비준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했으며, 프랑스와 네덜란드 비준 부결 이후에는 반대 여론이 70%에 달함

4. 독일

- 독일정부는 헌법안 비준 부결과 예산안 합의 실패가 유럽의 총체적 위기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EU확대 및 터키 가입문제 역시 변화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
- 독일 전경련(BDI)은 프랑스 국민투표의 비준 부결은 유럽차원의 관료주의 및 정치 엘리트 위주의 EU통합 추진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하면서도, 헌법조약 비준 일정 연기와 예산안 결렬 사태가 유럽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리스본 아젠다(Lisbon Agenda)와 서비스시장 개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
- 독일이 EU 가입국 중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으나, EU로부터의 실질적인 지원 및 혜택이 없다는 점을 들어 독일의 재정분담금을 축소해야한다는 여론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5. 벨기에

- 벨기에는 국회 비준을 거쳐 EU 헌법조약을 비준할 예정이며, 형식적인 지방정부 의회 비준 절차만 남겨놓고 있어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비준이 결정된 상태

- 경협(FEB)을 포함한 대다수의 기업/경제단체들은 확대된 EU의 효과적 운영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EU 헌법조약 비준을 지지하는 입장
- 헌법조약 비준 작업이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으나, 반대 여론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어 국민 대부분은 EU 헌법조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6. 스페인

- 스페인은 EU 25개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실시, 투표율은 42.3%로 저조하였으나 투표자의 76.2% 찬성으로 헌법 조약을 비준함
- 스페인 국민들은 EU 기금의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다는 인식이 강하며, 따라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 부결에 당혹해하면서 EU 체제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 그러나 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에 비해 자국의 분담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예산안 표결을 거부함

7. 포르투갈

- 포르투갈 정부는 '05년 10월로 예정되었던 국민투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
-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 부결 결과는 친 EU 성향을 띠고 있던 포르투갈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쳐 헌법조약 비준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점증하고 있으며, EU 정상회담 이후에는 헌법조약안 사멸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음

8. 덴마크

- 덴마크 정부는 올해 9월 27일 예정이었던 국민투표를 무기한 연기하였으며, 소수 야당인 DPP(극우정당)와 UL(극좌정당)은 EU 헌법조약 비준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 관련 업계 2대 대표기관인 덴마크 산업연합회(CDI)와 덴마크상공회의소(DCC)는 EU확대와 통합만이 미국과 아시아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여기고 EU 헌법조약을 지지하는 한편, 예산안 협상 실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
- EU헌법 비준에 대해 찬성이 우세하였으나,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헌법 비준 부결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부정적 여론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9. 스웨덴

- 스웨덴 정부는 연말의 의회 비준 일정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발표
- 스웨덴은 네덜란드와 함께 국민 1인당 분담금이 가장 많은 국가로,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경제규모 대비 자국분담금이 과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예산안 통과에 반대
-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많은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 등 EU 통합 및 확대 당위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준방식을 의회비준이 아닌 국민투표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10.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지난 4월 이미 국회비준을 통해 EU 헌법조약 비준이

완료되었으나, 일각에서 유로화 도입 이후 이탈리아 경제 침체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ECB와 OECD가 이탈리아 경제침체를 유로존 경제성장률 저하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EU 체제에 대한 불만이 일부 표출

- 그러나 이미 비준이 완료된 상황이라 EU 헌법조약과 관련해서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추가적 논쟁이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음
- 다소의 희생을 감소하더라도 예산안을 타결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으나, 업계 일각에서는 유로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수출회복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11. 헝가리

- 헝가리 정부는 EU 헌법조약 비준이 역내에서 비교적 약소국으로 분류되는 헝가리의 이익과 권리를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비준 무기한 연기가 EU의 추가적인 확대에 지장을 초래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
- 민간업계는 헌법조약 비준 연기와 예산안 부결로 인하여 EU 확대가 지연되고 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음
- 헌법조약 비준이 의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내용이나 이슈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나, EU 확대가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12. 폴란드

- 폴란드는 금년 10월 국회에서 EU 헌법조약을 비준할 예정이었으나 정상회담 후 비준을 연기

- 유럽 통합이 강화될수록 폴란드 경제와 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헌법조약 비준 연기 결정과 예산안 협상 결렬로 인한 EU지도부 간의 갈등이 EU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13. 체코

- 주요 정당별 EU 헌법조약 비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체코 정부는 비준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였으며, Klaus 체코 대통령은 EU내 엘리트주의를 비판
- 신규 가입국 중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체코의 기업들은 EU 헌법조약 비준 연기와 예산안 부결이 EU 확대와 서유럽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
- EU 확대가 지연될 경우 신규 시장 및 투자처로 부상하던 루마니아, 불가리아로의 투자가 위축되어 관련 업계 및 체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체코 국민들은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헌법조약 부결 이후 헌법조약에 대해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서다가 현재는 관망세로 전환

14. 터키

- 터키 정부는 EU 헌법조약 부결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부결 원인의 하나로 터키의 EU가입 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 EU 헌법조약 비준 연기와 예산안 부결이 10월로 예정된 터키의 EU가입 협상 시작 일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가입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터키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은 터키의 EU가입이 정치, 사회,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일련의 사태들이 터키의 EU가입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려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15. 루마니아

- 루마니아 정부는 EU 정상회의에서 루마니아의 EU가입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가 나온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EU 헌법조약 비준 연기와 예산안 부결이 루마니아의 EU가입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
- 현재 루마니아 정부는 EU가입에 대한 EU집행위의 이행 점검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오도록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EU가입 일정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업계에서는 헌법조약은 정치적인 것으로, 경제와 분리하여 생각한다는 입장이며, 단기적으로는 EU 헌법조약 비준 연기 등이 정서적 불안감을 형성할 수는 있으나 중장기 가입 일정 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16. 불가리아

- 불가리아의 시메온 작스 코브르(Simeon Saxe-Coburg) 총리는 불가리아의 2007년 EU 가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는 EU 정상회담에서 대부분의 유럽 지도자들에게 확인을 받은 것이라며 EU 가입에 자신감을 피력
- 정부 부처, 각종 언론에서도 불가리아의 EU 가입에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EU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EU 통합/확대 반대 동향에 우려

- 불가리아는 EU 집행위의 요구를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무난하게 2007년 EU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Ⅲ. 파급효과

1. 정치적 측면

- EU의 정치적 통합 및 정책 결정 속도 저하
 - 헌법조약 비준 절차가 무기 연기되고, 최소 2년 정도는 비준이 어려워짐에 따라 EU의 정치적 통합은 당분간 어려워졌으며, EU는 현재와 같은 니스조약체제하에서 운영될 예정
 - 이에 따라, EU는 이번 헌법조약에서 제안했던 가중투표제 방식의 정책 결정이 아닌 만장일치제를 통한 정책 결정이 불가피해졌으며, EU가 25개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만장일치를 통한 정책 의결/집행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음
- EU 확대 속도 저하
 - 정상회담에서 확대와 관련된 기존 약속 준수를 재확인함으로써,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경우 EU 집행위원회의 이행 점검 보고서가 통과될 경우 예정대로 2007년 가입이 완료될 예정이나, 여론을 의식해 보다 엄격한 기준의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 터키 역시 10월 3일로 예정된 가입협상 시작일은 준수될 것이나, 여러 국가에서 회교국가인 터키의 가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실제 가입협상의 진전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는 금년 3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이후의 신규 회원국

가입조약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의무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향후 EU 추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 장 르미에르(Jean Lemierre) EBRD 총재는 EU 확대 정책을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터키와 슬로베니아 등의 정치, 경제 개혁이 진전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EU 집행위원회의 바로쑈(Barroso) 의장은 EU확대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터키의 EU가입에 대한 '솔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 EU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에 대한 영향력 감소

- 각종 정책 결정에 있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각 회원국의 권한이 커질 것으로 전망
- 향후 EU 정책의 초점이 대내적인 문제, 즉 경제성장과 실업문제 해결 등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각국 내 여론을 수렴해나가는 과정에서 EU 집행위원회의 회원국들의 재정 정책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

2. 경제적 측면

□ 유로화 약세 지속

- 유로화의 對 달러화 가치는 1월 이후 10%이상 하락한 1.2082(6월 24일 기준)로 작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 EU 통합 이후에도 계속된 유럽의 경기 침체, EU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정치적 불안정성, 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 미국 연준위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로화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유로화 약세는 EU 지역의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으나, 유럽의 경우 수출품 가운데 2~3년 기간으로 가격이 미리 협상되는 설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환율 변동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또한 현재까지는 유로화의 강세로 고유가의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았으나, 유가가 연일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화 가치 하락이 지속될 경우 고유가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빠르게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 현재 국제환시장에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국제통화로 부상하던 유로화의 국제시장에서의 위상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

□ 대외 통상정책 강화 가능성

- 경제 활성화를 수반하지 못한 EU통합 및 확대에 대해 대다수 서유럽 시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성장 및 실업률 해소가 EU 확대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
- EU 헌법조약 비준 부결을 계기로 각국 리더들은 자국 내 여론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EU정상회담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향후 대외 통상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동유럽 경제에 악영향

- 중기 예산안이 향후 6개월 이내에 합의되지 않으면 2006년말 이후에는 잠정예산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신규회원국들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어, 동유럽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폴란드의 경우 신예산안에서는 구조기금으로부터 연간 87억 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잠정예산에 의거할 경우 46억 유로만 지원 가능

- 역내 무역 비중이 큰 EU 지역에서 유로화 약세는 구 회원국들이 주요 수출처로 삼고 있는 신규 회원국들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현재 유럽 내 투자 흐름은 신회원국들이 조만간 유로화를 도입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이 흔들릴 경우 투자자본 회수와 함께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Mr. Norbert Walter, 도이치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

3. 한국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對 EU 수출에 악영향

- 1999년 1월 ~ 2005년 5월까지의 유로화 월평균 환율과 월평균 수출금액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약 0.55로 나타나 (0.7이상일 경우 매우 관계가 높음을 의미) 환율이 수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동유럽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큰 폭으로 신장하고 있던 주요 동유럽 국가로의 수출에 타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며, 신규 회원국들을 서유럽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아 직접 투자를 해 온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간에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쿼터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이태리 등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중국의 對 EU 수출물량이 제한되는 등, 대외 통상 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은 對 EU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작성자

-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부장 외
15개 해외무역관 조사담당직원
- ▣ 해외조사팀 김호준 책임연구원

EU헌법조약 비준 연기 및 예산안 부결의 파급효과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5년 6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